

최고위도 친명계 독식?...비명계 저지 안간힘

朴-비명계, '李 힘빼기' 스크럼...朴 "개딸들 정당될까 무섭다" 李, 득표율 관리 주력... '李 힘빼기' 친명주자들 "중진協 반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이제 결승점(경기·서울 경선)만을 남겨두면서 당권 경쟁 양상도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 5개 최고위원직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쓸어 담는 분위기로 흐르자 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힘 빼기'에 막판 주력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승부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적어도 '이재명 진정제' 구축은 막겠다는 의지로 일한다.

당장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문제를 이슈화하며 견제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둔 '전당원 투표 조항'을 언급하며 "산술적으로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결의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발(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인 것까 봐 무섭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주말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 1·2차 경선에서도 잇달아 대패하며 추격세를 살리지 못했다.

그는 "아구는 9월말 2아웃부터라지만

지금은 6회말, 7회초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득표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진문(진문재인) 운영찬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는 '586, 진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사실상 이 후보를 겨냥한 행사다. 5선 출신인 이상민 의원과 이원욱(3선)·김종민(재선) 의원 등 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 진문 인사는 "오늘 토론회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적어도 전당대회 날(28일) 대의원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이재명계는 친명계의 최고 위 독식을 막기 위한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진문 운영찬 의원이 전날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송갑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 사실상 단일화한 것은 비이재명계 후보 1명이라도 최고위에 진출시키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6위인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회의 참석하는 원내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9.09%로, 친명 주자인 박찬대 후보(9.47%)와 박병 양상이다.

현재 당선권(1-5위)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2위)도 포함돼 있지만 당내에선 고 의원을 비이재명계로 분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진문 핵심인 전혜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의원 표까지 다 합산한다면 운영찬 의원의 사퇴가 전대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효과"에 힘을 실었다.

계파색이 얽은 수도권 중진 의원도 "이재명 지지층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위원 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송 후보는 호남 대표성에 비이재명계 상징성도 있어서 '운영찬 표'를 대거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대 분수령이었던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에 췌기를 박은 만큼 여세를 몰아 역대 최고 득표율을 찍고

'강한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비이재명계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의원 투표(투표 반영 비율 30%)에서 득표율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민주당 전대 최고 득표율인 70%대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물론 1차 여론조사까지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수도권 경선(27일, 경기·서울)과 대의원 투표 및 2차 여론조사(28일)다.

'관리 모드'에 돌입한 이 후보로선 앞서 '당헌 개정'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전당원 투표' 논쟁에도 굳이 발을 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서 이재명 리더십의 힘을 일찌감치 빼놓으려고 하는데 기존 전대와 비교해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여야 중진협 의제 구상'을 두고 친명계 최고위 주자들은 물론 강성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재명 힘 빼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구상이 여야 지도부 위에 위치한 '육상육'으로 기능하면서 '이재명 리더십'의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상은 여야가 검수완박과 같은 곤경에 빠졌을 때 국회 차원의 돌파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리더십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위원회 구상, 균형발전 역행”

이용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 질타 정부안대로 될 경우 '소외지역 경쟁 격화'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사실상 균형발전을 무력화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지난 22일 개최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상은 균형발전을 무력화할 쿠데타에 가까운 발상"이라며 "균형발전 역주행을 뺀히 알고도 계속 침묵한다면 쿠데타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이다. 그런데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함께한 100일 보고서 상에는 '균형발전'

이라는 단어가 전무했다. 선거용으로 국민 약속을 남발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공허한 모습이다.

또 지난 7월 25일 산업부와 행안부는 기존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회를 대체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며,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8월말 또는 9월초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지원특별법 제정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을 위한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균형위 차원에서 법안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돼 공론화 시기만 엿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기자

이 의원은 "윤 정부의 산업부·행안부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강행한다면 ▲수도권 집중 ▲소외지역거리의 경쟁 격화 ▲호남과 같은 취약지역의 사업 배제 ▲재정자립도 높은 곳으로의 예산 쏠림 등 크게 4개 문제가 곧장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 정부는 지역 기업과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환경을 대체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며,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8월말 또는 9월초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지원특별법 제정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을 위한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균형위 차원에서 법안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돼 공론화 시기만 엿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기자

소병철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이 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선을 지체화하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전철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고 방 실장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 전

철화는 결국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추경 예산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4천700억원이나 삭감했고 그 중 전남 예산을 1천209억원이나 삭감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남과 순천을 위한 성과를 보여줄기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김희재 “다주택자들 지방 저가주택 싹쓸이”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 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천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천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천194억원에 달했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증가세를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다주택자 싹쓸이 경향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 싹싹한 맛
홍삼성분 다량 함유	▶ 풋내가 없음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느끼한 맛 없음
6년근 1등삼 25지	▶ 깔끔한 맛
국산 홍삼만 사용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goryeohongsam.shop